

중 국

[판례 분석]

불법 복제 도서 유통에서 판매자의 합법 출처 항변 판단

2026. 5. 20.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판매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직접 제공하는 이른바 “위탁배송” 방식을 통해 불법 복제 도서가 판매된 경우 판매자는 공급자의 신원, 정품 공급 여부,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해당 도서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증명해야 하며, 단지 “제3자 배송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1. 현황

중국에서 교재, 참고서 등 학습 도서의 불법 복제 및 판매 문제는 저작권 분야의 고질적 침해 유형으로 인식되어왔음.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불법 복제 도서의 유통 경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복제 도서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판매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이른바 “위탁배송” 방식이 온라인 소규모 점포 운영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불법 복제 도서 판매자들이 자신은 그 도서가 불법 복제본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복제물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저작권 법리가 실질적인 권리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본문에서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수험 문제집의 불법 복제본을 판매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통하여 도서 판매자의 합법적 출처 입증책임 적용 방법과 법정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琼0107民初8816号
-------	----	--------------------

	2심	(2025)琼73民终108号		
관할 법원	1심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충산구 인민법원(海南省海口市琼山区人民法院)		
	2심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법원(海南自由贸易港知识产权法院)		
당사자	A 씨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B 씨		1심: 피고	2심: 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B 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 존재 여부 2. B 씨의 법적 책임		
	2심	1. B 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 존재 여부 2. 1심 배상 금액의 적절성 여부		
판결 결과	1심	1. B 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됨. 2. B 씨는 A 씨에게 경제적 손실 및 권리 보호 합리적 비용 총 2,000 위안을 배상해야 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0조 제1항 제6호, 제52조 제11호,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제19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최종 판결일	2026년 2월 27일			

(1) 사건 개요

A 씨는 X 수험 교재(이하 "사건 도서"라 함)의 저작권자임. B 씨는 Y 온라인 플랫폼에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고 사건 도서와 동일한 이름의 도서(이하 "분쟁 도서"라 함)를 해당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였음. A 씨는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분쟁 도서를 구입하여 사건 도서와 비교한 결과 분쟁 도서가 사건 도서의 불법 복제본임을 확인하고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B 씨는 "자신이 운영한 온라인 스토어에서 분쟁 도서를 판매하였으나 분쟁 도서의 배송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쟁 도서가 불법 복제본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

음. 또한 B 씨는 스토어 운영 기간이 짧고 주문 수량이 적어 A 씨의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1심 배상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 안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B 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 존재 여부
- ② B 씨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

① 원고 적격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는 “당사자가 제출한 저작권 관련 초고, 원본, 적법하게 출판된 간행물, 저작권 등록증서, 인증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권리 취득 계약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 또는 제작물에 성명이 표시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의 권리자로 추정한다. 다만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A 씨는 사건 도서의 서명인이며 출판 성명 및 권리 귀속을 확인하는 성명을 제출하여 사건 도서에 대한 저작권 귀속이 인정됨. 따라서 A 씨는 사건 도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음.

② 저작권 침해 여부

발행권이란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함. B 씨가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해 사건 도서의 복제본인 분쟁 도서를 판매하여 대중에게 제공한 행위는 A 씨의 발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③ 합법 출처의 항변 성립 여부

a. 1심 법원의 판단

합법적 출처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조는 “출판자·제작자는 그 출판·제작의 합법적 허가를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발행자·임대자는 자신이 발행 또는 임대한 복제물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B 씨는 분쟁 도서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분쟁 도서와 사건 도서 사이에는 종이의 품질과 인쇄 선명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확인됨.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분쟁 도서가 사건 도서의 불법 복제본임이 인정됨.

b. 2심 법원의 판단

B 씨는 “자신이 판매한 분쟁 도서는 제3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해당 도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2심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A 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인터넷 주문 화면 캡처에 기재된 분쟁 도서의 택배 송장 번호와 1심 법원이 법정에서 개봉한 소포의 송장 번호가 동일하였음. 이는 곧 B 씨의 온라인 스토어의 주문과 분쟁 도서의 실제 배송이 동일한 거래임을 의미함. 따라서 분쟁 도서는 B 씨 또는 B 씨가 지정한 제3자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비록 B 씨는 분쟁 도서가 제3자 발송 방식으로 배송되어 자신은 그 도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 씨는 분쟁 도서의 주문번호, 운송장 번호, 제3자 공급업체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도 자신이 분쟁 도서를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또한 1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분쟁 도서는 사건 도서와 비교할 때 크기 차이가 존재하였고 사건 도서는 종이가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인쇄 상태가 선명한 반면, 분쟁 도서는 재질이 거칠고 인쇄 글자도 비교적 흐릿하였음.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분쟁 도서가 제3자에 의해 발송되어 자신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B 씨의 항소 이유는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1심 법원이 B 씨가 A 씨의 사건 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본 법원은 이를 유지함.

2) 법적 책임

① 1심 법원의 판단

본 안건에서 B 씨가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개설한 온라인 스토어는 이미 등기 말소되었으므로 <개인독자기업법(个人独资企业法)> 제2조¹⁾의 규정에 따라 B 씨가 A 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A 씨가 B 씨의 침해 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실과 B 씨의 위법 소득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 손해배상을 적용함. 법정 손해배상에서 법원은 침해 행위의 정황을 고려하여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으며 배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이 포함됨.

이에 1심 법원은 사건 도서의 유형, B 씨의 침해행위의 성질, 침해 기간과 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및 A 씨가 동일한 사건 도서에 대해 여러 상대방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 씨에게 총 2,000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함.

② 2심 법원의 판단

본 안건에서 B 씨는 자신이 운영한 온라인 스토어의 영업 기간이 짧고 분쟁 도서의 실제 주문 수도 적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1심의 배상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B 씨가 답변서 및 관련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실제 손실, B 씨의 불법 수익 또는 사건 도서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었음. 따라서 1심 법원이 법정 배상 방식을 적용한 것은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함.

또한 1심 법원은 법정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B 씨가 개설한 온라인 스토어의 영업 기간, 침해

1) <개인독자기업법> 제2조: "중국 국내에 설립되고 1인의 자연인이 투자하며 재산이 투자자 개인 소유이고 투자자가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조직을 개인독자기업이라 한다."

기간, 분쟁 도서의 주문 수량 등을 이미 고려하였음. 그 외에도 사건 도서의 유형, B 씨의 침해 행위 성질, A 씨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그리고 A 씨가 사건 도서에 대해 여러 상대방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B 씨에게 A 씨의 경제적 손실 및 권리구제 비용으로 총 2,000위안을 배상하도록 재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하며 이를 유지함.

3. 판례분석

1) 온라인 도서 판매자의 합법 출처 항변 성립 기준

본문의 판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탁배송 방식으로 도서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본 판례는 “합법 출처 항변”과 “부지(不知) 항변”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우선 부지 항변은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도서가 불법 복제본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인식에 관한 주장임. 반면 합법 출처 항변은 판매자가 유통한 복제물이 적절한 유통 경로를 통하여 공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주장임.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양자는 서로 관련될 수 있으나 법적 성격과 입증 대상은 명확히 구분됨.

본문의 판례에서 B 씨는 자신이 운영한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된 분쟁 도서가 제3자 발송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었으며, 자신은 해당 도서가 불법 복제본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의 판단 중심은 B 씨의 주관적 인식 여부 자체가 아니라 판매자가 유통한 복제물의 합법적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음.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조에 따라 발행자·임대자는 자신이 발행 또는 임대한 복제물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는 단순히 “불법 복제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해당 상품이 적절한 공급망을 통하여 유통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함.

그러나 본문의 판례에서 B 씨는 제3자 발송을 주장하면서도 제3자 공급업체 정보, 주문번호, 택배번호, 거래 내역, 정품 공급 자료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오히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인터넷 주문 화면에 기재된 송장 번호와 법정에서 개봉된 소포의 송장 번호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분쟁 도서가 B 씨 또는 B 씨가 지정한 제3자에 의해 발송되었다고 인정하였음. 또한 분쟁 도서는 사건 도서와 비교할 때 크기, 종이 질감, 인쇄 선명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법원은 단순한 “부지 항변”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복제물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본 사건에서 핵심은 “몰랐는가”가 아니라 “적절한 공급 경로를 증명하였는가”에 있었음.

이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가 단순한 중개자나 수동적 전달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유통 주체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줌. 특히 위탁배송 방식은 판매자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으나, 그러한 거래 구조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의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만약 판매자가 “제3자 발송이므로 침해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불법 복제 도서의 유통 구조에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본 판례는 온라인 도서 판매자에게 최소한의 거래 검증 의무와 자료 보존 의무를 요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매자는 공급업체의 신원, 거래 내역, 정품 공급 여부, 영수증, 유통 허가 자료 등을 보존해야 하며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하여 복제물의 합법적 출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

2) 불법 복제 도서 판단 기준

본문의 판례는 불법 복제 도서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어떠한 증거 구조를 사용하는지를 잘 보여줌.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 도서와 분쟁 도서를 비교하여 크기, 종이 품질, 인쇄 상태 등의 차이를 확인하였음.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도서는 종이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인쇄 상태가 선명하였으나, 분쟁 도서는 질감이 거칠고 인쇄 글씨가 비교적 흐렸으며 두 도서 사이에는 크기 차이도 존재하였음.

다만 본 사건에서 법원이 불법 복제 여부를 인정한 근거는 단순한 외관 차이만은 아니었음. 법원은 외관상 차이와 함께 B 씨가 분쟁 도서의 합법적 출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음. 즉 “외관 비교”와 “합법 출처 입증 실패”가 결합되어 불법 복제 여부가 인정된 것임.

이러한 판단 구조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증명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가짐. 권리자는 정품과 불법복제물 사이의 외관상 차이를 제시하여 불법 복제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판매자는 해당 도서가 적법한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되었음을 거래자료와 공급망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함. 따라서 본 판례는 불법 복제 도서 사건에서 “외관 비교 + 합법 출처 입증책임”이라는 증거 판단 구조를 제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본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공급망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온라인 판매 구조에서는 실제 제작자와 판매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판매자는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부정하려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부지 항변”만으로는 면책이 불가능하며, 판매자가 스스로 거래 경로의 적법성을 검증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3) 소액·다수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법정 손해배상의 조정 기능

본문 판례에서 법원이 법정 손해배상 산정 과정에서 “동일 저작물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를 상대로 여러 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고려하였음. 이는 법정 손해배상이 단순히 권리자의 손해 회복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침해 규모와 사건의 비례성을 반영하는 조정 장치로서

의 기능도 수행함을 보여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동일한 도서의 불법 복제본이 여러 판매자를 통해 소규모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권리자가 각 판매자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는 정당할 수 있음. 그러나 개별 판매자의 침해 규모가 작고 실제 판매량이 많지 않은 경우, 각 사건에서 과도한 배상액을 인정하면 손해 회복을 넘어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음.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A 씨가 사건 도서와 관련하여 여러 상대방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사정을 고려하였고, B 씨의 영업 기간, 주문 수량, 침해 기간,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위안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음. 이는 법원이 법정 손해배상이 권리 보호와 과잉배상 방지 사이의 균형 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불법 복제 도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온라인 도서 판매자의 합법 출처 항변 성립 기준 및 불법 복제 도서 여부 판단 기준을 확립하여, 불법 복제 도서의 유통이 오프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실에 대응하여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실효적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5)琼73民终108号